

새로운 충남, '생활복지운동의 중심'으로

고수현 | 사회복지학 박사, 금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복지행정학회 부회장,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위원)

새로 출범한 안희정 호(號) 충남도정의 방향은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그간의 민선4기의 도정이 '강한 충남'을 슬로건으로 산업경제 성장전략에 치중해 왔다고 보면 민선5기의 도정은 자못 달라질 것으로 예견된다. 지난 지방선거과정과 새로 정비된 주요공약에서도 충남복지재단 설립·운영이나 충남희망교육재단설립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충남사회복지공제회 설립·운영 등을 전면으로 배치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복지·교육정책'이 더 이상 '주변부 도정'이라는 인식이 변화할 것으로 본다. '변화'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고 때로는 '혁신'이나 '개혁'이라는 용어로 적용되면서 안정적인 부류의 사람들에게겐 성급하다거나 거부적인 반응을 가져오기도 하는 단어이면서 이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여건이나 규모도 1995년 6월의 단체장 선거이후 15년이 지나오면서 엄청나게 발전되어 지방정부의 업무나 재정 면에서 균형이 잡히고 과학적 행정을 견지하는 것이 보편화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 대구 등의 일부 광역시·도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민선단체장은 지역내총생산(GRDP)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도정의 중심을 두어왔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충남의 경우도 지난 민선4기의 성과는 전국 지역내 총생산 성장순위에서 선두 위치를 점유했다는 것으로 포장되어 왔다. 그러나 충남이 한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산업 경제적으로 우월한 여건이라는 지리적이고 경제적인 인식만큼이나 다수의 사람들에게 '살기 좋은' 혹은 '행복한' 지역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제 와서, 사람(도백)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난 민선정부의 성과나 허물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간 충남의 도정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

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사람중심’의 삶의 터전이 구축되는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이 아니라 ‘지역적·공간적 중심’의 지역개발(regional development)에 도정의 중심을 두어왔다는 점이다. 마치 우리나라가 중앙집권시기인 1990년대 후반까지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을 숭배한 나머지 IMF 시기 이후에 등장한 정부에서는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안정대책을 강구해야만 했던 것처럼 이제 지방정부도 지역사회주민들이 진정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이 어디에 있는가를 숙고해야 할 시기이다. 그리고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변화의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야 할 시기에 와있다.

특히 충남은 과거 산업화시기인 1970~80년대에 전국적인 지역사회개발운동이었던 ‘새마을운동’을 선도했던 지역이라는 상징이 있다고 본다면 2010년대인 오늘날의 후산업화시기에서는 ‘사람중심’의 ‘생활복지운동’을 민·관 협동 전략으로 추진하여 민선5기의 새로운 성과물을 기약해볼 것을 제시해 본다. 그야말로 충남을 ‘생활복지운동의 중심(Heart of Well-being Movement)’으로 탄생하게 할 수 있는 복지정책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물론 경제정책과는 달리 복지정책은 국가의 전체성이라는 기본적 특성이 있지만 아동·노인·장애인복지 서비스나 교육복지서비스 측면에서 지방정부만의 특수시책들을 장기적 계획(Master Plan)으로 수립하고 ‘천천히 노력’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4년 이후에는 말 그대로 ‘새로운 충남’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진정하게 충남이 우리나라의 중심이고 ‘행복한 지역사회’로 발전하는 새로운 길(the new way)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